

與 “사법체제 부정” 野 “사악한 입틀막”...李 선고 공방

한동훈 “검수원복으로 수사 가능” “법무장관 시절 입법 강력 반대”

김윤덕 “당대표 교체 고려 안해” “2심선 진실·사실의 판결 될 것”

여야는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선고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검수원복(검찰 수사 원상 복구)’이 이뤄져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수사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원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원박’ 대로라

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 위증죄, 무고죄도 검찰 수사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면서 검수원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된 뒤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며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박상수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후 서울 도심에서 대정부 비판장외집회를 연 데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

을 흔드는 폭주”라며 “판결에 불복하고 거리로 나서는 모습은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민주당의 정치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전날 집회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민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공공연히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를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 대해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거리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거짓 선동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

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과 관련해 리더십 교체까지 염두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당대표 교체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2심 재판에서는 진실과 사실을 통해 법리적 판결이 제대로 될 거라고 믿고 있다”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길을 가겠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현재까지 당내 이견이 없다”며 “오히려 상당히 많은 의원이 당이 더 잘될 것이라고 격려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그는 재판부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데 대해서는 “검찰의 악의적 수사 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

지 못한 채 판결이 이뤄진 게 아닌가 한다”며 “사실과 법적 근거에 기초해서 법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 발언을 단죄하는 건 법 기술자들의 사악한 ‘입틀막’이라며 “정적 기술이 아닌 상식으로 파헤쳐야 하는 건 바로 명태균 씨 녹취”라고 역공을 펼쳤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김영선이 좀 해줘라’ 육성 녹취가 나와도 ‘기억’ 못하면 무죄고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라 기억도 죄를 묻나. 고무줄 잣대 구형을 기울어진 저울추로 다니 국민은 정의와 법치를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주, 오늘부터 ‘김건희 특검법’ 관철 2차 비상행동

11월을 ‘김건희 여사 특검의 달’로 규정 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비상행동에 나선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7시 국회 본관 계단에서 ‘김건희 특검법 관철 민주당 국회의원 2차 비상행동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특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여론전 성격으로 지난 5일부터 열흘 가량 국회에서 1차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이 예상되는 28

일까지 2차 단계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천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주말에는 대규모 규탄대회도 이어가는 등 대야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서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을 통해 윤 정부를 제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광주도시공사, 국회서 내년 국비확보 총력전

김승남 사장, 의장에 현안 요청

광주도시공사가 공사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를 찾아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활동에 나섰다.

17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김승남 사장은 지난 1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광주도시공사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사진)



이날 건의한 주요 국비사업으로는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조성사업(필요사업비 103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필요사업비 14억원)이다.

광주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 오랫동안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또 노후공공임대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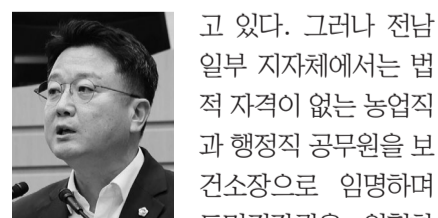
제고하고 노후화된 엘리베이터를 전면 교체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김 사장은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국비확보가 절실하다”며 “시민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언제든지 달려가 설명하는 등 발로 뛰는 행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병하 기자

최선국 도의원 “전남 보건소장, 비전문가 수두룩”

전남 지역 보건소장에 비전문직이 상당수 임용되고 있어 규제와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최선국(더불어민주당·목포1·사진) 의원은 지난 15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5년간 전남에서 비전문가가 보건소장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도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올해 초 비적격 임용으로 감사원에 적발된 지자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고 있다. 그러나 전남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적 자격이 없는 농업직과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며 도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보건소장은 단순한 행정관리자가 아니라 지역 보건을 책임지는 실무 관리자”라며 “전문성이 담보돼야 할 자리가 승진을 위한 자리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임용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와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야권, 대규모 장외집회... 대야 공세 수위 강화

이재명 “국민 있어 결코 죽지 않아” 박찬대 “정적 제거 부역 정치 판결”

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판결을 고리로 대야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대규모 3차 장외집회를 열었다. 3주 연속 열린 주말 장외집회이자 이 대표가 전날 1심 선고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처음 열린 집회다.

이번 집회엔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지역 위원장, 전국 당원 등이 함께 했다. 민주당이 자체 집계한 참가자 수는 30만명이다. 경찰은 2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비공식 추산했다.

정권 퇴진 운동과 거리를 뒀던 이전 집회와 달리 이번엔 “미친 정권”, “주인 자리를 되찾자”, “분연히 일어서자”는 다소 거친 발언이 쏟아졌다. 이 대표 1심 선고 결과를 계기로 발언 수위도 한층 거세진 모양새다.

이날 마지막 연사로 마이크를 잡은 이 대표는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된다”며 발언에 나섰다.

그는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닌 것 같다.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등으로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며 “이제 국민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 자리를 당당하게 되찾아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

일어설 때”라고 했다.

그는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우리는 동지”라며 “이제 우리가 주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동지들과 함께 손 잡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이 나라의 평화와 미래를 이 손으로 지켜나갈 때”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고 했다.

나아가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며 지지층 결집을 촉구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날선 발언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정치 판결’로 규정하고,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재판부가 동조하고 있다며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며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하지도 않은 발언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기소하더니 판사는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고 한다”며 “법 기술자들이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법치를 우롱하고 있다. 이게 정상이나, 이게 나라냐”고 물었다.

그는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을 벗어난 정치 판결에 분노하고 규탄한다”며 “저들이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김건희 윤석열 정권 최후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재차 촉구하며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헌법 세력을 국민이 심판하자”고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尹, APEC 정상회의 기념 촬영

윤석열(아래 오른쪽에서 두번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인 페루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등 참가국 정상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